



미국 : 아마존의 노조 조직 방해에 관여한 글로벌전략그룹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

아마존 노동조합(ALU)은 직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아마존과 컨설팅 회사인 글로벌전략그룹(GSG)을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소했다. 특히 GSG가 아마존의 노조 조직 방해 시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와 민주당, 환경단체 등이 연쇄적으로 반발하며 GSG와의 협력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¹⁾

GSG는 의회 및 민주당 정치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회사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지지세력의 정치자금 후원단체(Super Pac)인 프라이오리티 USA(Priorities USA)의 파트너 역할을 했으며, 구글 및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정치 및 기업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GSG가 아마존 사용자 측의 노조 조직 방해 시도에 연관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노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GSG에 2013~14년 동안 16만 달러를 지출한 미국 교원노조(AFT)

와 2005년부터 174만 달러를 지출해 온 북미서비스노조(SEIU) 등은 향후 GSG와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뿐 아니라 환경단체인 환경보호유권자연맹(The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과 네바다 및 아이오와 주의 민주당 조직 역시 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ALU를 무료로 대변해 왔던 변호사 세스 골드스타인(Seth Goldstein)은 “GSG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민주당, 노조, 진보 조직들에게 그들(GSG)이 아마존을 위해 한 일을 진정성 있고 투명하게 밝힐 때까지 더 이상 그들과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G의 상무이사인 타냐 맥(Tanya Meck)은 “아마존과 우리의 업무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일에 관련된 것은 실수였고 현재는 그 일에서 손을 뗐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1) Palmer, A.(2022), “Biden Pollster GSG is ‘Deeply Sorry’ for Amazon Anti-union Work as Labor Groups Abandon It”, *CNBC*, April 14, <https://www.cnbc.com/> (검색일 : 2022.4.19).

미국 : 에이미스 키친, 노동조건 문제로 불매운동 표적이 되다

최근 몇 주간 식품 제조기업인 에이미스 키친(Amy's Kitchen)의 캘리포니아 주 산타 로사(Santa Rosa) 공장에서 위험한 노동여건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함과 동시에, 사용자 측이 노동자를 위협하

고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고발이 있었다.¹⁾ 에이미스 키친은 오랜 가족경영을 바탕으로 다른 대형 식품 기업에 비해 가족친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간의 기업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열성적인 지역 기반을 갖고 있던 이 기업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소장에서 장기근속 노동자인 세실리아 루나 오헤다(Cecilia Luna Ojeda)는 지나친 업무 속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상 우려를 제기했고, 그 외에도 장비 결함, 비상구 차단, 반복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업무량, 휴식 및 깨끗한 물 이용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 할 때 요청이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보복을 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사용자 측은 지난 달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문을 게시한 바 있다. 앤디 베를리너(Andy Berliner) CEO는 화장실 이용과 비상구 차단 등에 대한 폭로를 부인했고, 회사가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를 안전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현재 사용자 측에 맞서는 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캘리포니아 주가 에이미스 키친의 사

회적, 환경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팀스터(Teamster) 노조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식품정의 추구 조직인 “푸드 임파워먼트 프로젝트(Food Empowerment Project)”, 진보연론조직 “더 완벽한 조합(More Perfect Union)” 및 채식주의 조직 “베지 미하스(Veggie Mijas)” 등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²⁾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몇몇 식료품점은 에이미스 키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 거대 체인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인디애나 대학의 수닐 베디(Suneal Bedi) 조교수는 이번 불매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판매량 자체에 큰 손실을 주지 않더라도 기업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에이미스 키친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업 명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훨씬 민감할 것이라고 보았다.

1) Heil, E.(2022), “Amy’s Kitchen Boycott Follows Claims of Worker Injuries, Mistreatment”, *The Washington Post*, April 13, <https://www.washingtonpost.com/> (검색일 : 2022.4.19).
2) Saxena, J.(2022), “The Labor Disputes at Amy’s Kitchen, Explained”, *Eater*, April 7, <https://www.eater.com/> (검색일 : 2022.4.25).

미국 : 불평등 감소,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회복 효과¹⁾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CEA)는 최근 발표한 연간 경제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의 시행, 반독점법의 강

력한 집행, 연방 최저임금 인상, 노조 조직률 증가가 미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 성장의 파트너로서 공공 영역을 회복시키

는 것, 그리고 기업과 사용자에게 과도한 시장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EA의 세실리아 라우즈(Cecilia Rouse) 위원장 겸 경제학자는 자본과 노동의 비대칭적 힘이 실제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위원회 메리 달리(Mary Daly) 위원장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그는 지난 30년(1990~2019)간 미국 경제의 체계적 불평등은 총 23조 달러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접근에 관한 형평성

을 제고한다면 매년 7,90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한 고용 관행 등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인재의 잘못된 분배, 혁신 억제,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적은 인센티브 등의 원인이며 이러한 구조적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미국 경제의 형평성 있는 성장과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맹세했다.

1) Shalal, A.(2022), "Reducing Inequality, Hiking Minimum Wage Could Boost U.S. Economy - White House", *Reuters*, April 14,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 2022.4.19).

미국 : AFL-CIO, FIFA에 2026 월드컵에 관한 노동권 압력¹⁾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2026년 예정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에서 인권, 노동권 관련 문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면서, 최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는 이미 각종 인권, 노동권 위반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건설에 동원된 이주 노동자들 중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강제노역, 임금체불, 심각한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지난 2021년 12월, AFL-CIO는 다른 노동 및 인

권 조직들과 함께 FIFA에 공식 서한을 보내 2026년 월드컵을 시행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노동 기준 보장과 이에 대한 단체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만약 이것이 없다면, FIFA는 사실상 저임금, 위험한 노동환경, 불균형 성장 등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AFL-CIO의 캐시 페인골드(Cathy Feingold) 국제부 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FIFA는 단지 형식적인 답변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월드컵 개최와 노동 문제는 밀접한 연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개최 도시 선정 프로세스이다.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는 2026 FIFA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참가한 미국의 총 17개의 도시 중 하나이다. 이 곳에는 주로 환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UNITE HERE 노조의 362지부가 있으며, 주로 디즈니 및 식당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다. 이곳의 에릭 클린턴(Eric Clinton) 위원장은 시 정부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노조의 목

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 문제에 관련하여 FIFA 대변인은 “본 단체는 축구와 연관된 인권 문제에 관하여 이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확고한 헌신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개최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1) Sainato, M.(2022), “Largest US Union Federation Presses Fifa on Labor Rights around 2026 World Cup”, *The Guardian*, April 8,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2.4.19).

독일 : 연금 수령액 기록적인 인상 예정

독일의 약 2,100만 명의 법정 연금수령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구 서독 지역 가입자에게는 5.35%, 구 동독 지역 가입자에게는 6.12%의 연금 인상이 있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구 서독 지역에서는 현재 34.19유로인 계산상의 연금 중앙값이 36.02유로로, 구 동독 지역에서는 33.47유로에서 35.52유로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인상폭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은 최근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연방노동부는 2021년 11월 말 4.4% 인상을 예고한 바 있으나, 법정 연금보험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인상폭이 증가했다.¹⁾ 질병 등 노동능력감소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연금 수령액이 7.5% 인상될

예정이다.²⁾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연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제적인 전쟁 상황과 물가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리의 연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연금수령액이 소득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즉 보험 수입이 감소할 경우 “연금보증규정(Rentengarantie)”에 따라 연금을 동결하는 대신, 이후 다시 수입이 증가할 경우의 연금인상분에는 “회복인자(Nachholfaktor)”³⁾를 적용하여 이전의 손실과 다시 균형을 맞춘다. 실제로 2022년 연금액 결정에도 회복인자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2021년 연금수령액 결정 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법정 연금보험의 수입 감소에

도 불구하고 연금보증규정에 따라 연금수령액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기록적인 연금 인상 결정에 대해 사용자들은 연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회복인자는 느리게 적용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반

하여 노동조합들과 좌파당은 예정된 연금 인상은 식료품 물가, 임대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상에 불과하다며, 회복인자를 적용하여 연금 인상폭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⁴⁾

- 1) Tagesschau(2022), "Renten steigen um bis zu 6,12 Prozent", März 22, <http://www.tagesschau.de/> (검색일 : 2022.4.19).
- 2) Tagesschau(2022), "Größte Rentenerhöhung seit Jahrzehnten", April 13, <http://www.tagesschau.de/> (검색일 : 2022.4.19).
- 3) 연금 인상 시 적용되는 회복인자는 기존 연금액 결정 시 산술적으로는 연금이 감액되어야 했으나 연금보증에 의해 동결되었던 부분을 추후 인상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연금 인상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4) Süddeutsche Zeitung(2022), "Minister Heil: "Rentner nicht von Lohnentwicklung abkoppeln", April 12, <http://www.sueddeutsche.de/> (검색일 : 2022.4.19).

독일 : 신호등 연정,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정책 발표¹⁾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2022년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7.3%를 기록했다.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도 나날이 커져 우려를 낳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소위 신호등 연정은 3월 24일 에너지세 인하, 지원금 지급, 대중교통티켓 출시 등 부담 경감정책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재무부 장관은 4월 27일 해당 정책과 재원 조달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내각에 제출했는데,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약 17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정이 발표한 부담경감방안은 우선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및 액화가스 연료에 부과되는 에너지

세를 6월 1일부터 세 달간 유럽 최소기준으로 인하는 것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30센트, 경유의 경우 리터당 14센트에 해당한다. 이 조치는 연정 내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들어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었다.

다음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노동자는 일회적으로 세전 300유로의 지원금을 수령한다. 지원금은 피고용인의 경우 월급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감액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장기실업수당(Hartz IV) 등 사회부조 대상자에게도 총 200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들은 기존에 지급되는 자녀수당에 더하여 자녀 1명당 100유로의 추가 지원금을 수령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6월 1일부터 90일 동안 월 9유로로 지역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약 2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승객연합회 프로 반(Pro Bahn)의 칼 페터 나우만(Karl-Peter Naumann) 대변인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 먼저 해

결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여행객이 선호하는 노선의 열차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열차 증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가 해당 정책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독일연방과 각 주는 재원 조달 및 운수업계의 비용보상 등과 관련하여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1) RP Online(2022), “Welche Erleichterungen die Bundesregierung ab 1. Juni geplant hat”, April 14, <https://rp-online.de/> (검색일: 2022.4.19).

독일 : 저임금고용의 상한 임금인상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법 초안¹⁾을 발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저임금 고용형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초안²⁾도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연방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하나의 개정 법안으로 합쳐져 연방상원의회에 정부 법안³⁾으로 제출되었으며, 2022년 4월 말 현재 의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간당 12유로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미니잡 고용의 상한 임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월 450유로에서 520유로로 인상된다. 이와 같은 미니잡 상한 월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부분은 면제되고 사용자의 부담 부분은 일부 감면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 월 급

여수준과 연동되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소위 미디잡 고용의 경우에도 현행 1,300유로인 상한액을 1,600유로로 인상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이하 IAB)는 저임금 고용이 정규직 고용을 대체하거나, 특히 여성을 단시간 노동계약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미니잡 고용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점이 없는 청소년, 대학생 또는 연금생활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잡 고용에 적용되는 임금 한도를 법정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인상한 것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저임금 고용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저임금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

용을 발생시킬 우려 또한 병존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IAB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임금 고용 관련 개정 법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개혁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⁴⁾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반영하여 연방상원의회는

지난 4월 8일 발표된 심의결과⁵⁾를 통해 사용자가 미니잡으로 고용한 노동자를 사회보험납부의무가 있는 일반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적 조치가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1)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2022), “Entwurf eines Gesetzes zur Erhöhung des Schutzes durch den gesetzlichen Mindestlohn”, 21. Januar, <https://www.bmas.de/> (검색일: 2022.4.21).
- 2)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2022), “Entwurf eines Zweiten Gesetzes zu Änder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1. Februar, <https://www.bmas.de/> (검색일: 2022.4.21).
- 3) Bundesregierung(2022), “Entwurf eines Gesetzes zur Erhöhung des Schutzes durch den gesetzlichen Mindestlohn und zu Änder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23. Februar, <https://www.bmas.de/> (검색일: 2022.4.21).
- 4) Bruckmeier, K., T. Lietzmann, U. Walwei & J. Wiemers(2022), “Reform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https://doku.iab.de/> (검색일: 2022.4.21).
- 5) Bundesrat(2022),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Drucksache 82/22, 8. April, <https://www.bundesrat.de/> (검색일: 2022.4.21).

독일 : 전문인력 취업비자(Blaue Karte) 발급 현황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소위 “블루카드”를 소지한 이주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카드는 EU 차원에서 마련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이주민 정책¹⁾의 하나로, 독일에서는 2012년 8월 1일부터 해당 입법 지침을 국내법적으로 전환한 법률²⁾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다.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연봉 5만 6,400유로 이상인 노동계약 내지 일자리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연봉액을 4만 3,992유로로 인하하고 있다.³⁾ 현재 발급된 블루카드 중 약 절반 수준(48%)이 이와 같은 전문인력 부족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블루카드를 발급받아 독일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외국인 중앙등록부에 등록된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7만 명으로 전년(2020년 말)대비 6%



증가하였다. 이는 독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전체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의 18% 수준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독일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 수는 통계상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블루카드 소지자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2019년의 경우 블루카드 소지자 수는 2018년 대비 20%나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7% 증가에 그쳤고, 2021년의 경우 6%까지 하락하였다.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전문인력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인도가 약 28%(약 1만 9,900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국(약 6%, 약 4,200명), 터키

(약 6%, 약 4,200명), 러시아(약 6%, 약 4천 명) 순이었다.

또한 블루카드는 독일 내 거주 및 취업을 허가하는 체류허가의 일종으로서 외국인을 그 발급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학력 내지 자격증이 반드시 외국에서 취득한 것일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블루카드를 발급받아 체류 또는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 인원 중 독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약 28%(약 1만 9,600명) 수준에 달한다.

2021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34세였으며, 여성의 비율은 28%였다. 전체 약 7만 명의 블루카드 소지자 중 약 5만 7천 명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 1) Richtlinie 2009/50/EG
- 2) BGBI. I S. 1224, 2012.06.01
- 3)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경우 연방노동청(BA)에서 해당 직종을 선정하여 연 2회 발표한다. 2022년에는 66개 직종이 전문인력 부족 직종으로 발표되었다.
- 4)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2022), "70,000 Fachkräfte mit Blue Card arbeiteten Ende 2021 in Deutschland", 14 April,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2022.4.21).

영국 :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제한하려는 보수당 정부

영국 보수당 정부가 일선 직원들에게 사무실 근무로의 복귀를 강하게 촉구하자 이에 맞서 공무원 조직 내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제이콥 리스모그(Jacob Rees-Mogg) 내각부 부장관이

내각의 주요 부처장들에게 전달한 공문에서 16개 정부 부처별 사무실 근무 비율(4월 첫째 주 기준)을 집계하여 순위를 매긴 표를 전달한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리스 존슨 총리 측에서는 사업장 근

무로의 복귀가 납세자들의 기여로 건설되고 유지하는 건물들을 활용한다는 데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면 근무를 통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¹⁾

제이콥 리스모그의 부처별 순위표 발표 소식에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데이브 펜먼(Dave Penman) FDA 사무총

장은 사무실 근무자의 비율을 헤아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공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 노조 PCS의 마크 서윅카(Mark Serwotka) 사무총장 역시 재택근무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보와 관련하여 “제이콥 리스모그와 그의 보수당 동료들의 발언은 성실히 근무하고 팬데믹 기간 중에 큰 희생을 한 PCS 조직원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1) BBC(2022), “Jacob Rees-Mogg Calls for Civil Servants to Return to the Office”, *BBC*, April 19, <https://www.bbc.co.uk/> (검색일 : 2022.4.20); Weaver, M.(2022), “Civil Service Unions Condemn Rees-Mogg’s ‘Vindictive’ Back-to-Office Drive”, *The Guardian*, April 19,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2.4.20).

영국 : 시민들의 생계비가 급증하는 다섯 가지 이유

주요 경제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공급난까지 더해지면서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The Big Issue* 지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영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떻게 생계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 다섯 가지 경로에 대해 분석했다.¹⁾

첫째, 가스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소비자 부담하는 에너지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단위 비용도 54% 증가시켰다. 둘째, 2022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세 혹은 건물 임대료 역시 생계

비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다. 2021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2%에 그친 반면, 2022년 2월까지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국민보험료 인상 역시 생계비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가령 평균적인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2%에서 13.25%로 1.25%p 증가했다. 넷째, 영국 내 주요 운송 수단인 철도 운임료가 3.8% 증가했다. 다섯째, 2022년 4월부터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와 연금급여액 수준이 3.1% 인상되지만 물가상승률이 6.2%라는 점을 헤아리면 실질 급여액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달 최저임금이 6.6% 인상되었지만 급증한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다.

1) Wilson, S. and H. W. Hannah(2022), “Five Ways the Cost of Living Is Rising – and How to Get Help if You’re Struggling”, *The Big Issue*, April 1, <https://www.bigissue.com/> (검색일 : 2022.4.19).

프랑스 : 임금인상과 파업 및 국내 물가상승으로 노사갈등 첨예

2021년 하반기 데카트론(Decathlon)과 르루아 메를랭(Leroy-Merlin)이라는 두 기업의 전례 없는 대규모 파업은 노동자 임금인상 운동의 촉매제로서 역할했고, 이는 최근 아마존(Amazon) 프랑스 지사의 파업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탈레스(Thales), 다쏘(Dassault Aviation), 콩포라마(Conforama)의 노조 파업, 르노(Renault)와 미슐랭(Michelin)의 연례 단체협상 결렬 등 최근 노동자의 임금인상 문제를 두고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공공 부문에서까지 나타나는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과 시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석유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국내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5%로, 1985년 이후 최고치¹⁾를 기록했다.

2022년 3월 31일, 채용 전문업체인 월터스 피플(Walters People) 파리 지사는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당사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설문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기업 내 임금인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코랄리 라셰(Coralie Rachet) 지사장은 설문 결과를 두고

매년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5% 미만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노동자의 구매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프랑스 노동부는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최저임금에 2.4~2.6%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2021년 10월의 2.2%, 2022년 1월의 0.9% 인상에 이어 반 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세 번째 인상이다. 집계된 총 누적 인상률은 2021년 10월 이후 약 5.5~5.7%로 나타났으며, 5월부터 국내 최저임금은 세전 월 1,641~1,646유로로, 시간당 10.82~10.85유로로 인상된다.

한편 민주노동총연맹(CFDT) 로랑 베르제(Laurent Berger) 사무총장은 “2022년 5월 1일부터 171개 중 147개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했다.”라고 언급하며 2022년 4월 4일에 열린 상원 회의에서 노사간 새로운 협상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에릭 예에(Eric Heyer) 프랑스 경제연구소 책임자는 지금과 같은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의 인

상이 연쇄반응을 일으킬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의 1.7~1.8배에 달하는 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Aline Leclerc(2022), "Face à la flambée des prix de l'énergie et à l'inflation, des augmentations de salaires jugées trop faibles", *Le Monde*, le 7 avril, <https://www.lemonde.fr/> (검색일 : 2022.4.9).

프랑스 : 대형 유통그룹 오상(Auchan), 러시아 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로 입장 표명

지난 2022년 3월 27일, 프랑스의 대형 유통그룹 오상의 이브 클로드(Yves Claude) 대표이사는 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슈(JDD)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 남아 있는 직원의 40%가 주주이며 현재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러시아 내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년 전 세계 매출의 약 10%를 러시아 시장에서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¹⁾와 관련하여 르루아 메를랭(Leroy-Merlin), 데카트론(Decathlon)과 오상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 연합체인 뮐리에즈(Mulliez) 측은 회원 기업 모두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이 러시아 정부의 국가 예산에 일조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반면 오상 측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투자는 이미 중단된 상태임을 밝히면서, 현재 자회사

의 매장 232곳은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되는데, 주로 전자 상거래 활동을 통한 자주적인 기업 형태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상 그룹이 러시아 시장에서 급하게 물러날 경우 자회사의 매장이 전부 몰수되거나 각종 형사 고발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사가 러시아의 국유자산으로 전락하는 일은 오히려 러시아 경제 및 금융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43곳에서 오상 매장이 운영 중이며 약 6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제품의 90%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는 농산물과 생활필수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상은 인접 국가를 통한 새로운 공급망을 고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1) LeMonde(2022), "Auchan explique rester en Russie pour le bien de ses salariés et des clients", le 27 mars, <https://www.lemonde.fr/> (검색일 : 2022.4.1).



프랑스 : 5월부터 2.4~2.6% 상승된 최저임금 적용 전망

프랑스 노동부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올해 법정 최저임금(SMIC)이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2.4~2.6%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간 주 35시간제로 노동을 제공할 때, 현재 세전 1,603유로에 달하는 임금이 같은 노동조건에서 1,641유로 또는 1,645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후 월 급여로는 1,269유로에서 1,299~1,304유로로 이전보다 약 30유로에서 35유로가량 상승할 전망이다.¹⁾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 먼저 정부가 경제부양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매년 초 소득 최하위 20% 가정에 미치는 인플레이션(담뱃값 제외)과 기본 시급의 구매력을 반영하여 조율하거나 또는 같은 해 동안 물가가 앞서 산출된 최저임금 가치 대비 최소 2% 이상 상승할 때 이를 반영해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경우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2022년 3월 물가가 2% 이상 뛰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가오는 5월에 새롭게 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실제 프랑스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표 1> 최근 10년간 프랑스 최저임금 상승 추이

(단위 : 유로)

시기	최저임금 적용 세전 월 임금(주 35시간)	비고
2012년 1월	1,398	
2012년 7월	1,426	
2013년	1,430	
2014년	1,445	
2015년	1,458	
2016년	1,467	
2017년	1,480	
2018년	1,498	
2019년	1,521	
2020년	1,539	
2021년 1월	1,554	
2021년 10월	1,589	
2022년 1월	1,603	
2022년 5월	1,641	추정치 (1,641~1,645)

자료 : 프랑스 노동부(Les Echos 정리).

총 네 차례 상승하여, 세전 기준 한 달 급여가 100유로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1) Ruello, A.(2022), "Inflation : le SMIC va augmenter forte,ent le 1^{er} mai' Les Echos, 31 maes",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2.4.2).

프랑스: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정의 대폭 확대

지난 2021년 8월 2일 제정된 「근로보건법(Loi santé au travail)」이 2022년 3월 31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앞으로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성차별적 발언 및 행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 또는 한 사람이 주도하는 성차별 또는 성적 함의가 있는 행동이나 발언 역시 성희롱으로 분류된다. 더 나아가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성차별 또는 성적 발화와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역시 해당 성희롱 사례로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법과 달리 행위자의 의도

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판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발화와 행동을 하였는지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

그 외에도 노동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했다. 우선 노사가 합의하고 의료 데이터 등 개인정보 기밀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경력 중간 의료검진(visite de mi-carrière)”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용인이 만 45세가 되는 시점에 2년 이내 건강 검진을 진행하도록 했다.¹⁾

1)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2022), “Santé au travail: ce qui change au 31 mars 2022”, *Service-public.fr*, 7 avril, <https://www.service-public.fr/> (검색일: 2022.4.18).

일본: 공무원 상여 삭감하는 국가공무원 개정급여법 통과

2021년도 국가공무원의 상여를 0.15개월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급여법이 2022년 4월 6일 자민당과 공명당 및 입헌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¹⁾²⁾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일시금 등 일부 상여가 삭감될 예정이다. 개

정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평균 연수입은 행정직의 경우 6만 2천 엔 줄어 664만 2천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직의 경우 0.225개월분에 해당하는 9만 3천 엔 상당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³⁾

1) 毎日新聞(2022), 「国家公務員のボーナス、0.15カ月分減額 改正法が成立」, 4月6日, <https://mainichi.jp/articles/> (검색일: 2020.4.4).



- 2) 원래대로라면 2021년 겨울에 상여금이 삭감되었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삭감을 미뤘다. 이 법안에 따라 2021년 겨울에 상여금 삭감 예정분이 사후적으로 올해 여름 상여금에 반영되어 삭감될 예정이다.
- 3) 국가공무원 행정직의 임금 삭감 수치는 NHK에서 인용하였으며, 일반직의 삭감 수준은 자치노련 성명서에서 인용하였다. 自治労連(2022), 「一般職の国家公務員給与法等改正法の成立に抗議する(談話)」, 4月8日, <https://www.jichiroren.jp/> (검색일: 2022.4.14).
NHK(2022), 「国家公務員ボーナス0.15か月分引き下げ 年平均664万2000円に」, 4月6日, <https://www.nhk.or.jp/> (검색일: 2022.4.14).

일본 : 도쿄 나카노구의회, 공공업무 위탁 노동자의 저임금을 방지하는 공공계약조례 채택

2022년 3월 25일 도쿄 나카노구의회에서는 구가 발주하는 업무나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공공계약조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¹⁾ 이는 도쿄 23개 구 중에서는 9번째 조례 성립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구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 위탁업무, 지정관리업무 등에 대해 임금이나 보수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위탁 노동자의 과도한 저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하한선은 공구나 업무의 발주에 관한 심사회가 개최될 때 정해지는데, 나카노구는 구청 직원의 급여 및 동종 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설계하기로

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하청업체가 해당 조례를 위반하여 규정된 하한선보다 낮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구청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청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하청업체가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원청과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반 사항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위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1) 連合通信(2022), 「東京23区で9列目 中野区で公契約条例」, 4月2日, 『連合通信』 No.9728.

일본 : 직무급형 임금체계 확대

최근 일본에서는 연령이 오르면 임금도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폐지하고 직무급형 임금체

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¹⁾ 후지쯔는 2020년 4월부터 간부급 사원 1만 5천 명을 대상으

로 직무급형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하였고, 이 임금 체계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이 임금체계가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후지쯔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 대기업인 KDDI도 2022년 4월부터 직무급에 가까운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독자적으로 도입하였다. 히타치 등의 제조업 관련 대기업들도 직무급형 임금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직무급형 임금체계는

올해 춘투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직무급형 임금체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측은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직무급형 임금체계의 도입과 관련해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의 하마구치(濱口) 소장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목적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이 높은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 伊沢健司, 鈴木康朗(2022), 「年齢より職務で賃金が決まる ジョブ型雇用、大企業で導入広がる」, 3月31日, 朝日新聞, <https://digital.asahi.com/> (검색일 : 2022.4.20).

브라질 : 원격근무법 일부 개정, 하이브리드 근무형태 허용

보우소나루 정부는 2022년 3월 28일 재택근무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규칙을 완화하고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허용하는 원격근무법 임시 조치(MP n° 1.108/22)를 발표했다. 앞으로 노동시간 통제가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재택근무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야간 초과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택근무와 대면근무를 번갈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도 보장한다. 하이브리드 업무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성이 극대화된 근무 형태로 사무실 근무, 재택근무, 이동 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업무가 공존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노동시간 규정이나 근무형태 자율성이 큰 업무일수록 기업이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고정근무일 외에 원격근무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기반 시설 소프트웨어, 인터넷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기업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으며, 장애가 있거나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근무에 관한 내용은 개별 고용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노동계는 이로 인해 노조의 단체교섭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잠정 조치는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법적 효력을 갖지만,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¹⁾



1) Brigatti, F.(2022), “Novas regras do Trabalho híbrido começam a valer hoje”, *Folha de S.Paulo*, Março 28, <https://www1.folha.uol.com.br/> (검색일 : 2022.4.14).

브라질 : 노동계, 국가 재건을 위한 63개 대선 통합의제 확정

202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반 보우소나루 전선을 형성해 온 노동계는 일명 “2022년 국가 재건을 위한 노동계급 의제(Pauta da Classe Trabalhadora-2022)”를 최종 확정했다. 일자리, 권리, 민주주의, 삶 등 네 가지 영역의 63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제는 “국가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마련되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각 노총의 의결단위 논의를 거쳐 2022년 4월 7일 10개 노총 소속 대표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노동자 전국대회(Conclat)에서 마지막 승인 절차를 밟았다.¹⁾ 4월 14일에는 브라질의 발전을 재개하자는 제안과 함께 서명된 제안서를 룰라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으며, 룰라 후보는 제안서의 내용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라며, 브라질 재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즉각 응답했다.²⁾

노동계가 발표한 계급 의제는 지난 4년간 보우소나루 정부가 파괴한 노동, 복지, 인권 등 각 분야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브라질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목적을 두는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다.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빈곤 및 굶주림 퇴치, 연료 및 전기 세 등 가격 안정, 주택금융부채 재협상 프로그램 개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권에 기반한 소득창출 정책, 단체교섭 및 파업권 강화, 노사관계 시스템 민주화 및 2017년 노동개혁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노동분야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이 주요 전략으로, 주요 입법 과제인 노동개혁 폐지도 핵심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노동부 재편 방안도 담았다. 이 밖에 돌봄 및 가사 노동의 국가 책임제 강화, 아동 및 노예 노동 근절, 농촌 노동자 소득 보장, 일과 학습의 조화, 과학 및 기술훈련 투자 확대, 연대경제 촉진, 국민통합 건강 시스템 강화, 노인 생활조건 개선 정책도 주요 의제에 담았다.³⁾

1) 10개 노총은 다음과 같다: CUT, Força Sindical, UGT, CTB, NCST, CSB, Intersindical Central da Classe Trabalhadora, CSP CONLUTAS, Pública do Central do Servidor, Intersindical Instrumento de Luta.

2) Lula(2022), “Sindicalistas entregam pauta dos trabalhadores e manifestam apoio a Lula”, Abril 14, <https://lula.com.br/> (검색일 : 2022.4.16). 룰라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진행된 대선후보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노동계는 명시적으로 룰라를 지지하고 있다.

3) Cintra, A.(2022), “Conclat 2022 : confirma a Proposta de Pauta da Classe Trabalhadora”, *VERMELHO*,

Abril 3, <https://vermelho.org.br/> (검색일 : 2022.4.16). 노동계급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 <https://vermelho.org.br/wp-content/uploads/2022/03/Pauta-proposta-da-Classe-trabalhadora-2022-documento-para-discussa%CC%83o-25fev2022.pdf/>.